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책형)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A책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서울시 7급 행정학은 지문이 다소 길고, 생소한 분야 및 세부적인 법령에 대한 출제와 논란이 있는 지문들이 다소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출제로는 ‘문제 15번’ 효과성 성과감사, ‘문제 19번’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출제였습니다. ‘문제 15번’은 성과감사와 효과성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제 19번’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사회영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용어입니다. 해설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니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에 대한 출제로는 ‘문제 8번’ 커크하트(Larry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 ‘문제 13번’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출제였습니다. ‘문제 8번’은 수업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관료제모형은 각 이론들을 별개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특징과 대립되는 탈관료제의 일반적 특징으로 접근해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 다중합리성모형은 이미 2017년 국가7급 문제로 출제된 바 있으며, 이번 출제가 두 번째입니다.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제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문제10번’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이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론도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셋째, 논란이 있는 문제로는 ‘문제 4번’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문제 18번’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4번’과 관련해서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보다는 사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18번’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 역시 명확한 답이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총액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설문에서는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기하고 있어 설문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7급 시험문제의 경향은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과거 기출 지문의 반복적 출제보다는 새로운 지문들로 출제되고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되는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출제된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식 학습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우며, ‘하이패스 행정학 심화 강의’ 등을 통해 이해 중심으로 차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지금부터는 서울시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0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여·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남·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테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①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 ② 이익집단정치 (interest group politics)
- ③ 대중정치 (majoritarian politics)
- ④ 기업가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정답 ④ 설문의 캡슐커피 사용 규제는 환경규제의 예이다. 설문의 캡슐커피 사용 규제는 편익은 일반대중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집중되는 규제로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중 기업가정치상황(entrepreneurial politics)에 해당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226](#)

핵심체크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구분	대중정치상황	이익집단정치상황	기업가정치상황	고객정치상황
의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각각의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상황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동질적인 특정소수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편익은 이질적인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	규제의 비용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편익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상황	
비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좁게 집중	넓게 분산
편의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정치적 활동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강력한 집단행동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 혜택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혜택자는 집단행동
NGO의 역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여론화하려는 역할	NGO 역할이 위축됨	규제형성을 위한 여론형성 등 창도가로서 역할	규제를 형성하려는 특정이익집단의 감시자로서 역할
정부의 모습	정책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	정부의 역할이 위축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느슨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한 포획 현상
예	독과점규제, 방송·신문·출판물의 윤리규제, 음란물규제, 종교규제, 차량10부제 운행, 사회적 차별규제	의약갈등, 한약갈등, 노사분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규 등	환경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원자력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농산물최저가격제 등 가격규제, 수입규제, 직업면허, 택시사업 인가 등 경제적 규제

0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 ① ㄱ, ㄷ, ㅁ
- ② ㄱ,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설문은 모두 맞는 지문이다.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신뢰, (호혜성의) 규범,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ㄱ).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감시·통제비용)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ㄴ). 사회적 자본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ㄷ).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자연자원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ㄹ). 후쿠야마(F. Fukuyama)는 독일, 일본, 미국을 고신뢰사회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저신뢰사회(불신이 만연한 사회)로 보고 불신이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ㅁ). ↪
하이패스 행정학 p144

핵심체크 사회적 자본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호신뢰(믿음), 호혜성의 규범(친사회적 규범), 시민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Putnam)•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한 퍼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
이론적 기초	공동체주의와 뉴거버넌스론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관계 중시 : 인적·물적 자본과 대비되며, 규범과 관계를 강조하는 자본• 경제적 가치 :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자본• 공공재적 성격 :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자본• 자기강화적 성격 :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감소하는 자본• 비(非)동가적·비(非)동시적 교환관계 :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통해 유지·재생산되나 등가적 교환이나 시간적으로 동시적 교환이 전제되지 않은 자본• 상향적 형성 :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환관계에 의한 형성
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자치 및 담론적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제재력을 통한 상호 소망스러운 행위 유도• 거래비용 감소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순응도 향상 및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가외적 정치의 필요성 감소 및 지식 공유와 학습 촉진
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집단에 대한 대외적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집단 간 갈등이나 균열 야기• 집단규범 강요수단(동조성을 요구하여 개인의 사적 선택 제한)• 정부정책의 비판 결여• 형성과정의 불투명성 및 측정의 곤란성

03

월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경쟁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월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 ④ 월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④ 월슨(W. Wilson)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이 아닌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페스 행정학 p16

핵심체크 정치행정이원론 – 월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의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부인하고 행정을 정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순수한 관리·기술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
성립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관주의의 폐해 극복 및 실적주의의 확립(Pendleton법 제정)• 행정국가화(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현상• 유럽 학문(영국의 대의제와 독일의 관료제 등)의 영향• 사기업체에서 발달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영향• 시정개혁운동과 Taft위원회(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활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행정학 : 행정을 인적·물적 자원의 능률적 관리기술로 파악• 기계적 능률성 중시 : 부패 극복을 위해 능률을 제1의 공리로 인식(Gulick)• 원리접근법 중시 : 공식적인 구조에 대한 원리 중시• 규범적·처방적 이론 : 능률적인 행정을 위한 방안 제시
관련이론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관료제론, ③ 행정관리론(원리주의) 등

0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정답 ④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④). ①과 관련하여 신공공서비스론에 의하면 공공조직과 그 네트워크는 생산성보다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생산성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①번 지문은 다소 논란이 있는 지문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108**

핵심체크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개념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 수행에서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행정이 소유주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운동
배경	전통적 행정(관료제)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이론적 기초	① 민주적 시민주의, ② 시민사회모형 및 사회공동체주의, ③ 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신행정학), ④ 조직인본주의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주요가치 : 공유된 가치와 공익• 행정의 역할 :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 행정의 대상 : 고객이 아닌 시민• 행정의 활동방식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인 행동• 행정의 책임 : 책임의 다원화(복잡화)• 관료에 대한 시각 : 통제에서 공유된 리더십• 가치에 대한 시각 : 기업가 정신이 아닌 시민주의(citizenship)• 인간에 대한 시각 : 생산성보다는 사람 존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측면 : 민주행정의 규범적 모델 제시• 부정적 측면 : 구체적인 대안 제시 미흡

0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적이라고 본다.
-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떤다.
-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④ 다원주의론에 의하면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는 이익집단 내부의 문제(구성원의 수, 재정력, 응집력 등)에 기인한 것이지 정부의 차별적인 접근 허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262](#)

핵심 체크 다원주의

개념	권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세력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는 이론
주요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적 다원주의론 : 잠재적이익집단론, 중복회원이론, 공공이익집단론• 다알(R. Dahl)의 다원론
특징	권력의 분산
	권력은 다양한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분산된 불평등의 형태를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 정책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지님• 다만, 정부의 차별적 접근허용이 아닌 이익집단 내부의 문제(구성원의 수, 재정력, 응집력 등)로 인하여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
	경쟁과 균형
	이익집단 간에는 게임의 규칙에 따른 경쟁이 이루어지며, 잠재적 이익집단의 존재와 이익집단에의 중복가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형 국가 :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중립국가관 :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고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 풍향계 정부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역할

0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 한다.

- ① 드로(Y. dror)
-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 ④ 에치오니(A. W. Etzioni)

정답 ③ 설문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307](#)

핵심체크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 모형

의의	계층제적 위계질서가 없고,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아주 약하며, 여유재원이 부족(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귀납적 모형	
적용	계층제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조직의 결정, 다당제로 구성된 의회의 결정,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	
전제	문제성 있는 선호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의사결정에 참여
	불명확한 기술	참여자들은 최적 수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의사결정에 참여
	수시적 참여자	참여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함
의사결정	구성요소	① 문제의 흐름, ② 해결책의 흐름, ③ 선택기회의 흐름, ④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구성요소들은 독자적·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점화장치가 있으면 구성요소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의사결정 방식	진짜기 결정(choice by flight),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0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제로 이전의 관리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정답 ③ 균형성과표(BSC)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도 반영하고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85**

핵심체크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의의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칼프란과 노튼)		
측정지표	재무관점 (과거시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시장점유율, 원가절감율 등	
	고객관점 (외부시각)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 증감 등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시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시각, 선행지표)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 만족도 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측정시스템 : 조직원의 성과평가를 위한 장치• 전략관리시스템 : 조직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 성과지표, 실행계획으로 캐스케이딩하여 완성되는 하향적 전략관리시스템• 의사소통도구 :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과지표의 형태로 전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는 관리방식• 체계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임무 → 전략 → 성과지표로 연계하는 위계적(계층적) 체계• 상호균형 : 재무와 비재무, 외부와 내부, 선행과 후행, 단기와 장기 간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기법• 인과관계 :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동인으로부터 재무 관점의 향상된 재무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로 연계된 성과평가체계		
정부 적용	BSC의 원형은 재무관점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재무관점은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보고 사명달성이 성과, 납세자 관점, 고객 관점 등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		

0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컴퓨터 활용
- ② 사회적 충화의 억제
-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영속성
-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정답 ③ 커크하트(Larry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은 관료제와 대립되는 반관료제 모형이다.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은 관료제의 고용관계의 안정성·영속성을 비판하고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강조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31](#)

핵심체크 탈관료제

개념	관료제 병리에 대한 비판 하에 새롭게 제시된 미래형 조직모형	
특징	낮은 복잡성	① 고정적인 계서제의 존재 거부, ② 조직 내의 높은 경계개념을 타파하고 통합을 지향하지만 일의 흐름에 따른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음
	낮은 공식성	지위·권한중심주의를 배척하고 임무·능력중심주의 지향
	낮은 집권화	집권적 구조를 지양하고 분권적 구조 지향
	기타	① 기능중심주의가 아닌 임무중심주의와 문제해결중심주의, ② 조직의 생성·변동·소멸이 가변적 인 잠정성과 임무와 기구의 유동성, ③ 조직과 환경과의 경계관념 타파, ④ 분업화와 전문화의 강조가 아닌 집단적 문제해결 강조, 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 및 상황적응성 강조, ⑥ 의사전달의 공개주의, ⑦ 팀워크의 강조, ⑧ 결과중심의 산출 중시, ⑨ 수평적 구조와 자율통제, ⑩ 계선보다 막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농도가 높은 조직 등
모형	• 골렘비에스키의 견인이론 • 키카하트의 연합적 이념형 • 테이어의 계서제 없는 조직 • 케이멜의 자율적 조직과 협동적 조직	• 베니스의 적응적·유기적 구조 •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 • 런던의 이음매 없는 조직
장점	• 유동적인 환경에의 대응성 증진 및 성과 향상 • 조직의 초기발전단계에 유용(낮은 공식성) • 비정형적 기술에 적합 • 집단적 문제해결을 통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단점	• 조직의 루틴화 경향: 탈관료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관료제로 회귀 • 구조적 측면: 낮은 공식화와 임시적인 성격으로 조직의 불안정성 야기 • 구성원 측면: 비계서적 조정으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조성 • 업무수행과정: 조정·통합의 곤란성, 책임한계 불분명, 무임승차 야기	

0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인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엘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매클랜드(D. M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에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엘더퍼(C.Alderfer)의 ERG이론은 머슬로(A.Maslow)의 욕구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복합연결형 욕구단계이론). ↪ [하이패스 행정학 p492](#)

오답정리

-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 요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며, (생리적 욕구이던, 안전 욕구이던) 충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을 힘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어도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다.
- ④ 아지리스(Argyris)는 성숙–미성숙이론에서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인간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변화되지만, 조직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정답 ①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서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 흐름 외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41**

핵심 체크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

	힘이 강한 부문	의 미	조정기제
단순구조	전략부문	전략을 형성하고 조직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	최고관리층의 직접감독에 의한 조정
전문적 관료제	핵심운영부문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작업계층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사업부제(분할구조)	중간라인부문	전략부문과 핵심운영부문을 연결해주는 계선에 위치한 중간 관리층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기계적 관료제	기술구조부문	조직 내 업무처리 과정과 산출물이 표준화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문(기술관료로 구성)	과업과정 표준화에 의한 조정
애드호크라시	지원막료부문	기본적인 과업 흐름 외에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부문(전문가로 구성)	전문가들의 상호 적응에 의한 조정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이다. 균형인사정책은 사회적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548

핵심체크 대표관료제

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계층·지역 등)으로부터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여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배경	행정국가화 현상(관료의 자원배분권 확대)
대표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적·수동적·파동적·구성론적 대표성(상징적 측면[standing for])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의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것• 적극적·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행동적 측면[acting for]) :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을 대변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출신집단에 책임을 지는 것• 관계 :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나,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는 현실에서 명확하게 겹증되지 못했으며 허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장점	① 실질적 기회균등(적극적·진보적 평등), ② 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 ③ 행정의 대응성 증진,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⑤ 행정의 신뢰성 증진, ⑥ 행정의 책임성 제고(민중통제를 관료제에 내재화하여 행정통제 강화), ⑦ 주관적(심리적) 책임의 적정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 증진, ⑧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⑨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⑩ 합리적 정책결정 등
단점	①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 조장, ② 집단이기주의의 발현, ③ 공직취임 후의 재사회화 불고려, ④ 대표성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 ⑤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하, ⑥ 시민통제의 무력화(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할 위험성), ⑦ 감축관리나 작은 정부 이념과 충돌, ⑧ 자유주의 원리와 충돌(사회주의 이념에 입각) 등
구체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 적극적 조치• 한국 – 균형인사정책

12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정답 ① 특정직 공무원이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②), 자치경찰공무원(③), 지방소방공무원(④)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나,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하이페스 행정학 p 565

핵심체크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의의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	구성 ① 행정 · 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 · 지도직, ④ 전문경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1급에서 9급으로 구분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 • 연구 · 지도직은 연구관 · 지도관과 연구사 · 지도사로 2계급으로 구분 •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 ·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계급없이 직무등급으로 구분 • 임기제공무원(과거 계약직)과 전문경력관(과거 별정직)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시 · 도 선관위 상임위원(과거 별정직)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의의</td> <td>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 신분보장 · 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td> </tr> <tr> <td>구성</td> <td>① 법관 · 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자치경찰 포함), ④ 소방(지방소방서 포함), ⑤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포함), ⑥ 군인 · 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 · 경호공무원, ⑨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td> </tr> <tr> <td>특징</td> <td>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 차지함</td> </tr> </table>	의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 신분보장 · 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구성	① 법관 · 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자치경찰 포함), ④ 소방(지방소방서 포함), ⑤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포함), ⑥ 군인 · 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 · 경호공무원, ⑨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의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 신분보장 · 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구성	① 법관 · 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자치경찰 포함), ④ 소방(지방소방서 포함), ⑤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포함), ⑥ 군인 · 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 · 경호공무원, ⑨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특징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 차지함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의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력직 외의 비직업공무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의의</td> <td>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td> </tr> <tr> <td>구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임명시 국회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 : 장 · 차관, 청장, 처장,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td> </tr> </table>	의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임명시 국회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 : 장 · 차관, 청장, 처장,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의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임명시 국회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 : 장 · 차관, 청장, 처장,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의의</td> <td>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td> </tr> <tr> <td>구성</td> <td>① 비서관 · 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 차관보,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td> </tr> </table>	의의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구성	① 비서관 · 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 차관보,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		
의의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구성	① 비서관 · 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 차관보,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한다.
-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정답 ② 서메이어와 윌로비(Thumaier & Willoughby)의 다중합리성모형은 미시적 수준에서 다중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예산전략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역할 지향성을 지닌 예산운영자들의 해석적 의사결정 행태를 탐구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686

오답정리

- ①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과정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 ③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별로 다양한 합리성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예산활동과 행태를 보이는 다중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하기 위해 킹던(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핵심체크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다중합리성모형

다중합리성 모형	의의	'킹던(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을 통합한 모형(정부예산의 과정적 접근방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합리성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이 이루어짐• 세입의 흐름(설득의 정치), 세출의 흐름(선택의 정치), 예산균형의 흐름(제약조건의 정치), 예산집행의 흐름(책임성의 정치), 예산과정의 흐름(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함의	미시적 수준에서 다중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예산전략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역할 지향성을 지닌 예산운영자들의 해석적 의사결정 행태를 조명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정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2항). ↗ **하이패스 행정학 p719**

오답정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5항).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쭉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6조 3항).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1항).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정답 ① 성과감사란 3E's 즉,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감사이다. 특히, 효과성 (effectiveness) 성과감사는 ‘목표달성을 위한 감사’ 또는 투입과 산출이 아닌 ‘결과에 대한 감사’이다. 따라서 효과성 성과감사는 선택된 수단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④), 행정에 있어서의 결과인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객(사업대상집단)의 정의(②), 고객만족도(③) 등을 평가한다. 부처 간 협력성은 업무과정에 대한 것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727**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밸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답 ④ 밸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설인 티부가설(Tiebout)은 완전경쟁시장의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밸에 의한 투표 가설은 지방정부에서 공공재는 외부비용과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분권화된 체제가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759

핵심체크 티부가설(Tiebout)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하에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밸로 하는 투표(vote by foot)'가 이루어 진다면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지방정부의 경영이 보다 건전해지고 효율화된다고 보는 이론•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단위성을 강조하는 재정논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 : '공공재는 분권적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일방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
기본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경쟁하의 시장의 가정 : ①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② 완전한 정보, ③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 및 완전한 이동(거리비용=0),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규모수의 불변의 원리), ⑤ 외부효과의 부존재, ⑥ 국고보조금의 부재, ⑦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⑧ 최적 규모의 추구(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추구), ⑨ 지방정부의 재원 - 재산세로 충당, ⑩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등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는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 집적 현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간 이질성 심화로 인한 형평성 저하•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불고려 -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만 강조• 비현실적인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정책적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보조금의 확대는 효율성이라는 티부가설의 효용을 상실케 하며,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저하라는 티부가설의 한계를 방지하는 결과를 야기•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의 광역화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완화하고 이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티부 가설의 설득력을 높임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설립한다.

정답 ③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 [☞ 하이패스 행정학 p832](#)

핵심 체크 | 지방공기업

의의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직영 기업	의의	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과 직원으로 경영하는 기업(정부기업)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단체장이 임명(임기제도 가능) • 구성원 :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재무	특별회계로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함 • 지방직영기업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유형 간접 경영	의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법인체기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전액 출연 • 지방공사 :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다만 자본금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 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 또는 출연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단체장이 임면 • 구성원 : 회사원
	재무	독립채산제로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또는 공단은 법인으로 함 • 단체장은 사장(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함
경영위탁	계약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민간위탁)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	①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만 해당), ⑥ 하수도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개발사업 등	
경영평가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음)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정답 ② 의존재원이란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을 조정하는 재원을 말한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채는 의존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총액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설문에서는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기되어 있어 설문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 **하이패스 행정학 p818**

핵심체크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구성	자주재원	지방세	보통세(9개), 목적세(2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장려적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채	과세권을 담보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부담행위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준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정답 ②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주창된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을 의미 한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며,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보았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나 근본적인 특성을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3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오답정리

- ①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통한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③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강조하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 Cyber-Physical System) 혁명을 촉진한다. 여기에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연결해 공장이 자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말한다.
- ④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 강조되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준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 하이패스 행정학 p34

핵심 체크 정부관

구분	보수주의(작은정부론)	진보주의(큰정부론)
추구하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강조• 형식적 평등·기회에서의 평등 강조• 교환적 정의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국가에 의한 자유) 열렬히 옹호• 실질적 평등·결과에서의 평등 강조• 배분적 정의 중시
인간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욕구·협동·오류가능성 있는 인간관(행복의 극대화, 공동선, 시민의 미덕 강조)
시장관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A. Smith의 보이지 않은 손에 대한 믿음)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 인지
정부관	최소한의 정부 – 정부불신	적극적인 정부 – 정부개입 중시
경제정책	규제완화, 세금감면, 사회복지정책 폐지 등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정책, 정부규제 옹호
비고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